국정 정상화 이어 '정치복원' 나선다… 野 관계회복 시동

李 대통령 취임 100일 D-3

오늘 與野 대표와 오찬회동
장동혁과 단독 회동도 예정

정상외교 복원, 한미협상 해결
검찰·언론개혁 등 과제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100일은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파면 등 극도의 혼란을 딛고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는 시간이었다. 외교·통상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앞으로는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추진, 그리고 이에 따른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회동 의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며, 정청래·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양당 대변인과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후에는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기까지는 2년이 걸렸는데, 장 대표는 100일도 안 걸리는 셈이다. 장 대표는 앞서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전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야당 대표도 단독으로 만나는 이유는 '정치 복원' 때문이다. 100일 간 국정 정상화를 어느 정도 이뤄냈으니, 정치의 복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오전 6시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의결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 복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인도·캐나다·영국·멕시코 등 8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나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2차 추경안은 이 대통령 취임 한달 만인 7월4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12·3 내란 이후 침체됐던 골목상권에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우려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 7월31일 타결됐다. 미국의 강한 압박과 부족한 시간적 여유에도 15% 관세 부과라는 선은 지켜냈으며, 대미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지난달 23~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과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 후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갖고 있는 '친중 정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신뢰 관계를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치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인 검찰개혁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곧 국회에 상정된다. 현재 여야는 극한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당정이 검찰·언론개혁 등을 원만하게 이뤄내려면 야당의 반발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는 검찰개혁, 내란 척결 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 대표, '윤어게인' 세력의 강력한 지지로 선출됐으며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야당 대표가 서로 맞서는 형국이다.

또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12·3 내란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내란 특검의 수사로 밝힐 일이니, 결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야당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회동은 여당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며 선출됐다. 당원들의 강한 열망으로 인해 섣불리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당부하면, 당내 반발도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내란종식·李 정부 뒷받침"
국민의힘 "與, 반기업법 입법독재"

오는 9~10일 與野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본회의서 3대특검 연장 법안과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치 전망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복 대신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뉴시스

여야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비전과 전략 대결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제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입법독재' 프레임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을 회복시킬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산안으로 유례 없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인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대 특검 연장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일대오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당 대표 임기 초반 대여투쟁 동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법 개편 마무리"

검찰개혁안 논의 진행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대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세제 개편안·美 관세 등 불안감 해소 필요

>> 1면 '코스피, 허니문 랠리…'서 계속

하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수출 회복세는 이재명 정부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올랐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지만, 6월에 반등해 3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상승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내수 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소비·수출 호조에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 절대 수준은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다.

물론 모든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시장 참여자를 내모는 세제 개편안, 미국의 물가 상승, 미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 등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고, 현 정부의 노동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불안감도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